비판 빗발치자 뒤늦게 “정부 차원 모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 초반 소극적 대응을 보이다가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빗발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며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을 겨냥한 듯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도 했다.